똑똑하게 알아보고 신속하게 대응… 진화하는 AI 보안

영상분석·얼굴인식 기술 등 활용
건물침입 감지·화재 등 재난 대응
추적 기능·사건 전후 영상 전송도

보안전문 기업, 공장, 전력회사 등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건물에 침입자가 들어오거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파악해 조기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건물 보안관제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AI 보안관제 시장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알체라·스핀어웹·링크제니시스·T3Q 등 AI 기업들은 영상분석이나 사람·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보완관제 솔루션을 잇따라 내놓고, 보안 관련 대기업, 공기업 등에 제품을 공급해 영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AI 기반의 보안관제 기술이 도입되는 이유는 출동요원이 현장에 오지 않아도 되는데 출동하는 오류를 줄여주고, 침입 예측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 업무 효율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으로, 건물 보안관제에 AI 도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영상인식 전문기업 알체라가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서 건물 보안이나 화재 감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의 이상상황 감지 솔루션을 전시하고 있다. /알체라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는 건물 침입을 탐지하거나 화재 등 재난을 감지해 출동 명령을 내리는 AI 기반 보안관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KT텔레캅에 AI 침입예측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플랫폼은 현장에 자석, 열선 등 감지기를 설치하면 신호 발생시 AI 플랫폼에서 침입여부를 판단해 침입신호를 통합관제센터에 전달해 출동요원이 빠르게 출동하도록 해준다.

특히 침입 발생시 카메라에 신호 발생 시간 전3초, 후7초 영상을 요청해 플랫폼으로 전송해준다. 이 뿐 아니라 출입통제용 리더기로 인가된 사용자에 한해 출입문을 개방해 외부인 침입을 차단하며, 화재 등 위험을 대비해 실내환경 감시 서비스를 제공해 환경센서에서 공기질 상태를 수신하고, 변동폭 등 기준에 따라 AI가 비상위험을 판단해준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감지기에서 신호가 왔을 때 AI 기술로 출동요원이 현장에 출동해야 할지, 오지 않아도 되는 지 판단해 오출동은 물론 요경보도 최소화해준다"고 설명했다.

알체라는 건물에 누군가 침입이나 방화를 하거나 화재가 나는 등 이상상황을 감지하면 이를 빠르게 알려줘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AI 이상상황감지 솔루션을 한국전력의 남서울사업소 변전소에 공급해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카메라를 바꾸거나 별도로 인프라를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 CCTV를 AI 서비스에 연결하기만 하면 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스핀어웹은 '딥러닝 실시간 영상분석' 솔루션을 개발해 건물의 침입 탐지나 화재 감지 용도로 제품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다.

스핀어웹 관계자는 "영상분석 솔루션을 활용하면 CCTV 등과 연결해 건물 주변에서 연기 불꽃만 나도 이를 초기 감지하기 때문에 화재를 조기 진압할 수 있다"며 "사람을 인식하는 기술로 사람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거나 쓰러지는 등 이상행동을 하면 이를 잡아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링크제니시스는 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VLAD'를 보안 및 감시·모니터링 용도로 기업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솔루션은 공장이나 카지노 감시, 범죄 및 테러 예방을 위해 적용할 수 있으며, 카메라·이미지 파일 인식이 가능하며, 간단한 조작을 통해 인식 영역을 설정하고 업종별 데이터를 적용한 딥러닝 기술로 높은 인식률과 정확도를 제공한다.

T3Q는 인공지능 플랫폼인 'AIaas' 플랫폼과 영상인식 분야의 서비스팩을 결합해 AI 기반으로 건물 보안을 관제하는 솔루션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 회사의 솔루션은 CCTV 카메라 영상이나 촬영된 이미지에서 일상적인 행동, 일반적인 사물과 다른 형태의 움직임이나 목표물을 발견하면 이를 빠르게 경고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용의자, 실종자 추적 기능 등을 제공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與野 뉴딜펀드 줄다리기… 6000억 예산심사 장기화 예고

예결위 소위 예산심사
금융위 "정책자금 통해 마중물 역할"
野 "기존 사업과 겹쳐 대폭 삭감을"

내년도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 관련 예산 6000억원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처가 불확실한 뉴딜펀드 특성상 정책자금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 측은 뉴딜펀드 투자처가 기존 사업과도 겹치는 데다 조성방안이나 운용계획 없이 예산계획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원안 유지를, 야당은 대폭감액을 주장하면서 예산심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여야 공방의 중점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 예산 6000억원이다.

정성호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 등 의원들이 23일 국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금융위는 내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을 4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고, 그 중 6000억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금융위가 출자한 6000억원과 한국성장금융(성장사다리펀드)에서 8000억원을 출자받아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사업에 투자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을 자(子)펀드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기존 정책펀드의 투자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뉴딜펀드와 투자처가 겹치는 사업에는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위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8조원 규모로 조성한 혁신모험펀드 및 소·부·장 지원 펀드는 현재 5조원 이상 남아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뉴딜 분야의 경우 투자 위험도가 높고 단기간 내 이익실현이 불확실한 영역인 만큼 원활한 펀드조성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의 출자를 통해 민간출자자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에서 미리 후순위 채권으로 일정수준의 안전성을 담보하면 민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30일전에는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목표다. 하지만 예산을 두고 각각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예결위 의결이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구글 횡포, 법안만이 희망" 거북이 대응에 콘텐츠 업계 분통

"법안 시행 늦어지면 규제 불가"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를 막기 위한 업계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글이 내년 1월부터 인앱 결제 의무화를 통해 콘텐츠 업체로부터 수수료 30%를 걷어가는데 법안 시행이 늦어지면 소급 적용 문제로 인해 국내 법과 제도로 규제할 수 없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희망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글이 인앱 결제를 의무화할 경우 국내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액이 올해 2조원이 넘고 2025년에는 3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지난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유 교수는 "구글의 인앱 결제로 인해 2021년 콘텐츠 산업은 연간 약 2조1127억원의 매출 감소를 입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1만8220명 규모의 노동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 대응이 늦어질 때마다 하루 30~50명 젊은이의 꿈이 꺾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도 대응에 나섰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대리해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끼워팔기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구글을 신고한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와 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신고서 제출과 함께 건전한 모바일 생태계 구축을 막는 구글의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도 낭독할 계획이다.

구글 플레이

이들은 "구글의 반독점 행위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모바일 생태계에서 혁신은 사라졌으며 지속가능한 공생이 어려워졌다. 종속과 약순환만 남았다"며 공정위에 제재를 요청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6일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KB국민은행

스마트 기업대출 서비스

KB국민은행은 고객 중심의 기업여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KB스마트기업대출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KB스마트기업대출 서비스는 모든 기업고객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기업여신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여신신청과 한도 및 금리조회, 서류제출, 거래약정 및 진행상황 확인 등 기업여신 고객의 모든 과정이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 채널로 거래가 가능해졌다.

특히 고객과 은행의 끊김 없는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 연결 URL 안내' 서비스를 신설해 영업점 기업담당자가 필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요청하고, 고객은 이를 즉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기업뱅킹 가입이나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기업여신 업무가 가능한 모바일 웹 기반의 'KB스마트기업대출' 플랫폼을 신설해 모바일기기 사용이 많은 개인사업자 기업고객을 위한 비대면 거래 채널을 확대했다.

또한 비대면 전용 기업여신상품도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완결성을 개선했다. 최대 1억원 한도의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상품인 'KB디지털 소호(SOHO) 맞춤대출'의 경우 신청과 심사를 스크랩핑 정보와 외부정보 기반으로 전면 자동화해 대출 한도, 금리 산출, 대출실행에 이르기까지 약 5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아웃바운드 영업 지원을 위한 기업여신 시스템도 전면 개편됐다. 태블릿을 통한 아웃바운드 영업 시 여신 접수, 본부 협의, 서류접수 및 대출약정 등 기업고객과 상담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